

일본의 유럽하이테크 시장지배와 독일의 대응전략

— 독일연방 산업연합회가 작성한 내부분서 분석 —

KOTRA 함부르크 무역관

독일연방산업연합회 (Bundesverband der Deutschen Industrie)는 중요한 High Tech 분야에서 독일을 비롯한 유럽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이유를 심층분석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 연합회는 '91년 10월 21일 작성한 내부분서를 통해 국가정부와 경제계간에 역할분담의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즉 정부는 기업의 영업 활동을 촉진시키는 여건 조성 과 외국(일본 등)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업계의 시정요청 등과 같은 업무를 맡고, 민간업계는 자체의 산업정책을 주도적으로 입안하고 시행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1. 경쟁력 분석

정보통신 기술 및 첨단 전자산업부문에서 독일 등 유럽의 관련산업기반이 계속 침식당하고 있고, 일본과의 경쟁력 비교에서도 그 간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즉 세계 반도체시장에서 일본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80년 40%에서 '90년 50%로 확대되었

고, Memory Chip 부분의 경우 비중은 무려 90%에 까지 달하고 있다. Micro Processor 부문에서는 미국기업이 전세계 생산비중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유럽기업은 현재 일본과의 무역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특히 반도체 Chip 및 Computer부문에서는 모든 유럽기업들이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세계 공작기계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일본의 Fanuc사의 경우 일본기업이 아닌 타국의 최대 경쟁업체의 매출액보다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Hardware 및 Software을 포함한 System 측면에서는 독일기업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경쟁력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기계제조, 자동차제조, 전자기술 및 화학 부문에서는 독일기업이 아직은 경쟁력이 있으나 앞으로 얼마동안 지속될 수 있는지가 불확실하고 Microelectronic부문은 5년후 시장기반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독일기업이 현재 완전 우위를 보이는 유일한 부문은 환경오염방지 기술분야이다.

일본의 시장 침투 전략에 따라 유럽의 부품 공급업체들이 위협받고 있다.

본고는 독일연방산업연합회(BDI)가 하이테크부문 등에서 일본의 유럽시장 지배에 대한 대응책의 차원에서 자체분석한 보고서이며 그 원문을 독일 KOTRA 무역관이 입수, 분석정리한 것임을 밝힌다.

일본의 자동차 업체들은 미국에 자체 부품공급업체들을 침투시킴으로써 미국의 기존공급업체들이 압박을 당하고 있는데, 이같은 현상은 유럽에서도 재현되고 있다.

일본기업들은 유럽의 연구 프로젝트에의 참여 또는 기업매입 등을 통해 System 부문에서 갖추고 있는 독일 및 유럽의 강점을 활용함으로써 응용산업 기술부문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 일본의 강점과 유럽의 약점에 대한 이유

일본 기업들 전세계를 대상으로 영업하면서 비용절감 및 투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일본기업은 개발 투자비용 소멸시점을 이 투자로 개발된 제품이 전세계적으로 판매되는 시점으로 간주한다.

시장 잠재력이 예상되지 못했던 시기에 Video 생산을 위해 US\$ 850백만을 투자했던 점에서 일본 기업의 과감한 투자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오늘날 일본기업들은 이러한 투자전략의 이익을 톡톡히 보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중요한 장점은 자금 조성력에 있다. 대 은행들이 주도적 위치에서 이끌고 있고, 중·횡적으로 통합된 대규모 기업이 있다는 점도 유리한 점이다.

일본기업이 미국 및 유럽에서 시장 침투가 용이했던 것은 확실한 국내시장 기반이 있는데다 국내시장이 어느 나라보다도 보호되고 있다는 점에 기인되는데 일본제품이 일본 국내시장에서 가격이 보다 높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EC 역내시장은 단점을 갖고 있다.

일본제품 비용이 독일에 비해 50% 저렴하다는 것은 Management 및 Organization에서 장점이 있음을 대변해 주는 것이다. 일본경제는 2개로 크게 대분된다. 즉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고 근로자들이 있는, 국제화되어 있는 대기업권과 대기업들로 하여금 비용 압력과 적응의 필요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

일 본 의 강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막이 두꺼운 보다 크고 견실화 된 단일 국내시장(유럽 단일시장이 비교가 되지 못할 만큼 견실하고 많은 보호를 받고 있음) ○ 대규모 기업합병이 가능한 카르텔법, 대기업-중소기업간 효율적인 계열화 및 특정산업에 대한 집중적 금융지원과 저 이자율 혜택 ○ 전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Global Marketing(독일은 동독지역과 유럽에만 차중) ○ 경제 제1위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Consensus 존재 ○ 미래지향적 과감한 투자와 응용기술 개발(기초과학은 독일이 앞서 있으나 응용기술에서 뒤지고, 시장잠재력이 예상되지 않았던 시장에서 Video 생산을 위해 3억 5천만불을 투자했던 점 등)
독 일 의 대 응 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ATT를 축으로 하는 무역자유화와 Fair Trade Discipline 확립 ○ 대규모 기업합병을 보다 용이토록 해야 하며, 기업의 자금부담을 경감시키는 조치 강구 ○ 일본 보다는 미국과의 자본 및 기술 협력을 강화하여 범 세계적 차원에서의 마케팅 전개(일본 및 동남아 지역에 대한 투자도 강화) ○ 경영인, 학자, 정치인 및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대화의 채널을 효율화하여 산업정책에 대한 Consensus 도모. ○ 정부는 세제 등 제도개선, 사회간접자본 확충 및 불공정관행 척결에 치중하고, 업계가 산업정책을 추진하는 주체가 되어야 함(시장의 속정에 따라 구조적응과 변화의 주체는 기업이기에 때문임)

주는 중소기업권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는 Just-one time 개념에 중요한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다.

3. 결론 및 대책

대응전략 수립은 일차적으로 기업자신이 책임져야 한다.

기업자신이 문제를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빨리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반면 국가 주도산업 정책은 문제를 보다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여타 유럽, 미국 및 일본의 경쟁업체들과 협력 및 동맹이 요청된다.

독일 산업으로는 보다 더 유럽 지향적인 미국이 일본보다 협력 파트너로서 적합하다. 미국도 자국내에서 영향력이 커지는 일본산업을 현실적인 문제로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협력을 추진해 나가면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독일 산업은 일본기업과 밀접한 협력을 하고 있는 영국의 선례를 답습하기 어려운 데다 때가 너무 늦었다.

이같은 협력과 동맹이외에도 동남아시아(특히 일본)와 미국 등 중요한 시장에서 생산시설을 확충함이 필요하다.

독일기업은 독자적인 방법을 택해야 한다. 일본의 경영 및 지도 방법을 답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산업정책은 기본적으로 시장 중심이어야 한다.

국가로 부터는 외국의 불공정한 거래가 있을 경우 등에서만 도움이 필요하고 그외는 모두 민간기업이 자신의 산업정책을 입안, 추진토록 해야 한다.

국가는 미래시장을 잘못 선택할 수 있다. 국가 주도 연구 프로그램에 PC가 포함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 및 미국 회사법은 개인원리를 존중하기 때문에 Consensus가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 Consensus는 항상 보수성으로 향하는 경향이 있으나 일본은 예외를 보이고 있다.

독일 및 EC의 산업정책은 여건 개선의 차원에서 산업 그 자체를 위한 정책이라야 한다.

산업정책의 목적은 구조적 적응과 변화 및 개선에 있다. 세제 등 제도개선, 경제하부구조의 확충, 관료주의적인 장애요인 제거 및 전세계적으로 유통되는 규격 제정에 정책의 우선이 주어져야 한다.

유럽시장이 아닌 범세계시장의 차원에서 경쟁력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점에서 범세계적 경쟁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대기업 통합을 허용해야 한다. 독일독점위원회(Monopol Kommission)가 최근 Daimler-MBB의 병합에 반대하지 않았는데 이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대외정책의 경우 일본 및 미국, 또한 여타 EC 국가의 각종 제한정책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 GATT는 자유경쟁을 도모하는 규정을 완성해야 한다. 보호주의는 무역이 제한되며 국제시장을 양분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배제되어야 한다.

무차별 원리에 대한 외국의 위반사례는 국제협상시 반드시 주제로 삼고, 대응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여건 개선은 최근의 화학산업 기금설립과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이같은 여건개선 방안과 일치하지 않는 독일내 사례로는 대외경제법(Aussenwirtschaftsgesetze) 수정에 의한 자금 부담과 현재 논의중인 CO₂ 및 쓰레기 처리를 위한 부과금 도입을 들 수 있다.

경제계, 학계, 정치계 및 노동조합 등 관련 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산업정책에 관한 대화가 보다 활발히 진행되어 산업발전에 관한 Consensus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같은 대화는 앞으로 10년까지는 수시로 지속되어야 한다.

독일에서는 Consensus에의 도달이 가능하다고 본다. 일본과는 비교가 안될지는 모르지만 사회 및 문화적 토대에서의 이해 가능 폭이 어느 정도는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향후 산업정책은 유럽차원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협력방안이 모색될 것이다.